

“총선 투표 인증, 확인서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정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서... 감염 우려 막기 위해 도장 신체에 찍는 대신 투표확인서 발급 받는 방식 권고 자가격리자 투표시 일대일 동행·CIS로 동선관리

송성환 전북도지사 포함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계 제20대 국회 마무리 전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송 의장은 이날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 중 5.7%에 불과하고 의료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6개 시군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해 주민의 70%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가에서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내과는 62곳, 외과 88곳, 소아청소년과 89곳, 산부인과 98곳, 응급의료취약지는 99곳에 이르고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간호인력 역시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 9.7명의 절반인 4.6명에 불과해 간호학과를 포함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에서 공모 중인 방사선가속기의 호남권(전남 나주) 유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도 발표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오른쪽)을 비롯한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는 14일 전남도의회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중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날 감염 우려를 최소화 하기 위해 1m 거리두기와 발열 확인, 비닐장갑 사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진, 이른바 '인증샷'을 찍을 때에는 감염 우려를 막기 위해 투표 도장을 신체에 찍는 대신 투표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권고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반장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 이유는 손이 바이러스 접촉 감염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도장을 찍는 경우도 감염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투표 인증과 관련돼 여러 가지 대안적인 수단들이 있다. 투표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인증에 활용하는 방안들도 있으니 감염 예방에 안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총선이 공휴일인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을 재차 강

조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는 꼭 하시되 그외에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밀집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 내 환기를 통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이나 장소를 소독하면 손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면서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손이 자주 닿는 장소를 소독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중대본은 이날 무증상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와 자택을 오가는 과정에서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공개했다.

국내 자가 격리자 수는 지난 11일 오후 6시 기준 총 5만7278명이다. 이 중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 수는 아직 집계 중이다. 14일 밤이면 전체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 당일인 15일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는 관리자가 일대일로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동행한다. 수도권 등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선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 등으로 관리한다.

당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격리가 일시 해제되며 이 때 오후 6시 이

전에 투표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생항법장치(GPS) 기능을 꺼서는 안 되며 별도 대기장소에 대기할 때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화나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선거 종료 시간인 당일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시작하며, 투표 후에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법정부대책지원본부 박종현 홍보관리팀장은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를 통해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판으로 이동동선을 관리한다"며 "민약 경로를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기 2G라 자가격리 앱을 설치할 수 없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는 출발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출발한다는 의사를 통보한 후 외출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되는 도착시간에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귀가할 때 자택에 도착했다는 통보가 늦어지게 되면 역시 이탈로 간주하고 신고할 예정이다.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된다.

이 같은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본과 방대본은 총선인 15일 하루는 정례브리핑을 생략하기로 했다. 설 연휴와 삼일절에도 쉬지 않고 매일 이어오던 정례브리핑을 멈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시스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김윤덕, 선거운동 마지막 날 '한표 더' 유세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시어 기호1번 김윤덕을 선택해 주십시오"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의 선거운동 마지막 일성(一聲)이다. 김윤덕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4일 지역구를 순회하며 "한표 더"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정부를 지켜내고 성공시켜 잘 사는 전북,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1년 전 한 표 한 표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의 함배에 설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모두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에게 던져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정동영, 김성주 후보 허위사실 유포 추가 고발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병)가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정 후보에 따르면 민주당 김 후보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재산신고에서 자신이 지분 50%를 보유한 한누리넷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4조와 동법 시행령은 재산신고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실거래가격'의 의미를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민주, 16년 만에 과반 1당 가능할까?... 역대 총선 의석은?

2004년 국회 '탄핵 역풍'에 152석 '첫 과반' 현 판세 민주 우세 관측 속 수도권 등 경합 다수

14일 4·15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1당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선거 판세가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데는 정치권에서 큰 이견이 없다.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이 결정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데다가 '세월호' '테트 XXX' 등 막말 파문과 지도부의 자중지란 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고, 여기서 이탈한 부동층 표심이 상당수 진보 진영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의석 확보까지 기대하고 있으나 지역구 253개 의석 중 121개 의석이 불린 수도권과 절반 이상이 여전히 박빙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은 개헌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인 100석) 붕괴론까지 띄우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에 여권 일각에서 '별진보 180석' 전망을 내놓으며 보수 진영에 '오만한 여당' 공세 빌미를 제공, 통합당이 '심판론' 대신 '견제론'을 내세운 것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민

진보 진영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을 타고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이 총 209석 중 152석을 차지했다.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은 121석을 차지하며 양당 체제를 구축했다.

나머지 의석은 민주노동당(10석), 새천년민주당(9석), 자유민주연합(4석), 무소속(2석), 국민통합21(1석)이 나눠 가졌다.

그러나 4년 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한나라당(통합당 전신)이 총 209석 중 153석을 차지하며 과반 1당 지위를 탈환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과반 1당은 보수 진영 몫이었다. 총 300석 중 새누리당(통합당 전신)이 152석을 쟁겼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은 127석을 가져갔다. 그 외 통합진보당(13석), 자유선진(5석), 무소속(3석) 순이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 확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원 메시지를 통해 "아직 박빙인 선거구가 많다"면서도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면 16년 만의 과반의석도 꿈만은 아니다"라고 독려했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